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남연희 의원 발의)

의안 번호	1191
----------	------

발의년월일: 2017. 11. .

발 의 자: 남연희 의원

찬 성 자: 김종곤의원,은복실의원
윤종욱의원,김달호의원
이상철의원,신동욱의원
이성수의원,엄경석의원
문복란의원,박경준의원
(10명)

1. 제안이유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율참여 유도과 지도점검을 통하여 생활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주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 사업자, 주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5조)

다. 공사장 소음 상시측정 및 생활소음 측정방법(안 제6조 ~ 제7조)

라. 고소음 발생현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마. 소음저감 사전심사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0조)

바. 사업자의 소음저감 자율참여에 관한 규정(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소음·진동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입법예고: 2017. 11. 14. ~ 11. 19.(6일간)

라. 기 타: 특이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생활소음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평온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음(騒音)"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 등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2. “생활소음”이라 함은 사업장 및 공사장 등 생활주변의 소음배출원에서 지나치게 소음을 발생하여 주민의 정서적 안정 등 주거생활에 현저한 피해 우려가 있는 소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생활소음 등의 배출저감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2.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관의 협력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소음 등의 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의 저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의 평온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사업자는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사업공정에 따른 전 처리과정을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소음·진동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주민·단체의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활동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소음저감 실천으로 평온한 생활환경 정착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주민은 구가 시행하는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사장 소음 상시측정) ① 구청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 제반규정 준수 및 소음저감을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소음 측정 기기 설치 및 소음 상시 측정을 권고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설치 권고대상은 건축 연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사장 또는 주택, 학교, 병원 등이 인접한 특정 공사장중 구청장이 측정기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장

- ③ 구청장은 측정기기 설치대상 공사장에 대하여 대상구역, 설치기간,

부지경계선 또는 인접지역의 1개소 이상의 설치위치, 측정기기명, 상시측정방법 및 측정결과 공개방법 등을 명시한 측정기기 설치 운영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측정기기 설치 운영계획서는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소음의 측정방법) ① 생활소음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주택, 학교, 병원 등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위치한 공사장에 대해서는 소음피해의 사전 예방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소음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진동 측정결과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 등은 「소음·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제8조(고소음 발생현장의 관리) 구청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공사장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조(소음·진동 저감대책의 사전심사) 구청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공사장에 대하여 소음 저감대책에 대한 실천사항 등을 사전심사 할 수 있다. 이때, 심사결과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점검) 구청장은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1. 공사장 등의 소음에 대하여 저감대책 이행의무를 하지 않는 행위
2. 주거지역내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 등에 음향장치를 부착 사용하는 이동소음 발생 행위
3. 그 밖에 생활소음으로 인하여 주민의 정신건강과 평온한 주거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제11조(사업자의 소음저감관리 자율참여) ① 구청장은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 사업자가 소음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협약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협약 등을 통하여 자율환경 관리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보고 검사의 면제, 각종 행정 및 기술지원 등을 우선하여 지원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규 >

□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관리할 수 있는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16조(조업정지 명령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간대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공장에는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음·진동으로 건강상에 위해와 생활환경의 피해가 급박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해당 배출시설에 대하여 조업시간의 제한·조업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산업단지나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하며, 이하 "생활소음·진동"이라 한다)을 규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생활소음·진동의 규제) ②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확성기에 의한 소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과 국가비상훈련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확성기 사용에 따른 소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3. 제1항 각 호의 지역 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4. 공장·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21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란 별표 9의 기계·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별표 9의 기계·장비로서 환경부장관이 저소음·저진동을 발생하는 기계·장비라고 인정하는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공사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제외한다.

1.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2.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천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목건설공사

3. 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공사(土工事)·정지공사(整地工事)

4. 총연장이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 토사량의 합계가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굴정공사

5.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1. 확성기에 의한 소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과 국가비상훈련 및 공공기관의 대국민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확성기 사용에 따른 소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3. 제1항 각 호의 지역 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4. 공장·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③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7. 12. 20.

복지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발의자: 2017. 11. 13. / 남연희 의원

나. 회부일자: 2017. 11. 24.

다. 상정일자: 2017. 12. 6.

(제235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2. 제안개요

가. 제안설명: 남연희 의원

나. 제안이유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율참여 유도 및 지도점검을 통하여 생활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주민이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 사업자, 주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5조)

다. 공사장 소음 상시측정 및 생활소음 측정방법

(안 제6조 ~ 제7조)

라. 고소음 발생현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마. 소음저감 사전심사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제10조)

바. 사업자의 소음저감 자율참여에 관한 규정(안 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소음·진동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입법예고: 2017. 11. 14. ~ 11. 19.(6일간)

라. 기 타: 특이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사업장 및 공사 장 등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주민들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11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우리 구는 행당제6구역, 금호제15구역, 성수동 지식산업센터 신축 등 대규모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이 많고, 밤낮을 가리지 않는 각종 공사 소음으로 인근 주민들이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특히 주말·휴일에 소음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을 최소화하고, 사업자의 자율참여 유도과 지도점검을 통하여 생활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 조성은 물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참고로 서울시 13개 자치구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6. 질의 및 답변요지: 회의록 참조.

7. 토론요지: 없음.

8. 심사결과: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되었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